

데스크시각



김동욱 선임기자 겸 서둘취재본부장

지난달 30일 임기 4년의 21대 국회가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개막한 21대 국회의 최대 화두는 여야의 '협치' 일 것이다. 코로나19 후폭풍으로 민생은 물론 경제 전반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이제 정쟁이라는 과거 문법에서 벗어나 양보와 설득, 타협과 협상을 통해 창조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협치를 지렛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을 열어 가야 한다. 위기의 시대에 '정치가 희망'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미래를 위한 변화'가 될 것이다. 변화를 선점하지 못하는 정치는 결국 도태된다. 여야 모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호남 정치도 새로운 장정에 돌입했다.

호남 정치, 다시 시작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면적인 세력 교체는 물론 실질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호남 민심의 선택은 냉엄했다. 박지원, 천정배, 박주선, 정동영, 유성엽 등 그동안 호남을 대표했던 중진들은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모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들이 민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크지만 이미 그들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것이 호남 민심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에서 분열된 소수 야당인 민생당으로는 정권 창출 등 미래가 없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또 선거 기간 동안 인물론 등도 부상했지만 호남 정치의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중량감 다소 떨어지지만

역대 총선에서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은 정권 창출의 가능성에 집약됐다. 시대정신에 부응하고 정권 창출 능력이 있는 정당이나 인물을 선택해 왔다. 과거 노무현 바람, 열린우리당 바람, 국민의당 바람이 그러했다. 그런 측면에서 잠재적 대선 주자 하나 없이 지역당에 머문 민생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전별은 피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판결이를 마친 호남 정치가 당장 마주한 현실은 만만치 않다. 177석의 슈퍼 여당인 민주당에서 광주·전남 의석은 18석에 불과하다. 민주당 의석의 10%

를 겨우 넘어서는 다. 전북까지 합친다 해도 28석이다. 유일한 3선인 이계호 의원이 최다선이다. 무려 27명이 초·재선 의원인 것이다. 눈에 띄는 정치적 스타성을 가진 인물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솔직히 말해, 갑대중 전 대통령(DJ)의 복심이었던 박지원, 호남의 천재로 불리며 개혁의 상징이었던 천정배, DJ가 아꼈던 인물 박주선, 풀뿌리 정치의 대명사였던 주승용, 재정통이었던 장병관 전 의원 등 쟁쟁했던 인물들과 비교하면 대부분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변화으로 밀린 호남 정치가 단시일 내에 제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21대 호남 국회의원들은 '변화'라는 역동성과 '호남'이라는 상징성을 토대로 과감한 '도전과 응전'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호남 정치의 맥을 다시 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당내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지역을 뛰어넘고, 세대를 아우르며, 시대를 앞서가는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현안에 대해 과감하게 손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시대적 과제를 푸는 입법 성과를 통해 호남 정치의 날을 세워야 할 것이다. 스스로를 증명해 가는 치열한 과정이 필요하다. 당장 8월로 예정된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재선 이상의 호남 의원들에게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다.

호남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결집도 필

요하다. 호남의 정치적 역량 약화의 배경에는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중진들의 뿌리 깊은 반목과 갈등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정치적 세가 약한 현실에서 앞으로는 '원 팀'으로 뭉쳐 서로 밀고 끌어 주며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과감한 변화와 도전 기대

언제부터인가 '호남 정치'라는 단어는 정치권에선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 군사정권 하에서의 차별과 고립을 뚫고 온 몸으로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정권 창출과 정권 교체를 이루고 민주·진보 진영의 심장으로 자리 잡았다.

반대로 '호남 프레임'은 현실적 장벽이기도 하다. 과거 호남 중진들이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뛰어넘지 못한 한계를 이제 호남의 정치 신인들이 한 걸음씩 나아가며 극복해야 한다.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 호남 정치가 마주한 현실에서는 더욱 심감 나는 말이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과감하게 변화를 선점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호남의 정치인들이 21대 국회에서 폭넓은 연대와 융기 있는 도전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社說

지역 국회의원들 손발 맞춰 현안 해결을

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있지만 이미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에서는 오랜 지역 숙원 사업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광주의 지역 현안 중 하나인 국립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안정적 운영으로 본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도 절실하다.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은 5·18 폄훼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국립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안정적 운영으로 본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도 절실하다. 전남은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공모에서 탈락한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차세대 대형 원형방사광가속기 국가 구축에 새롭게 도전할 방침이다.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및 혁신공학 조기 건설 사업도 절

실한 숙원 사업들이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한데 모으지 못하고 있다. 당장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개정에서부터 광주·전남 국회의원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함께 추진하고 민주당 소속 177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는 '당론 법안'으로 정해 올해 내에 통과시키려고 했던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몇몇 의원이 제외돼 5·18 폄훼 특별법 개정도 절실하다. 지역 역량 결집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최근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어 의원들 간 불신과 반목이 우려된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18명)은 민주당 전체(177명)의 10%에 불과하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 아닌가.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항 이전 합의' 이젠 전남이 답할 때다

광주시가 광주 군 공항 이전 상황과는 별개로 민간 공항을 전남으로 이전, 무안 공항과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답보 상태인 군 공항 이전 사업에 구애받지 않고 민간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는 2018년 8월 열린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남 지역사회의 반발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가로막혔다. 이에 따라 민간 공항 이전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을 경우 민간 공항도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

기도 했다. 이 시장이 이날 "광주가 민간 공항 이전 약속을 지키면 전남 역시 군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반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6년 국방부로부터 '적정 승인'을 받은 이후 4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전 예비 후보지로 거론되는 전남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인데 특별법상 해당 지역민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신청이 없으면 군 공항 이전은 불가능하다.

이제 전남이 답할 차례다. 광주시가 무안공항의 발전을 위해 민간 공항을 우선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만큼 전남 지자체들도 주민 설득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군 공항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박홍균 포유건축 대표

펍킨 마을과 퍼스트 펍킨

는 흉한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다. 동네 주민 한 분(현 펍킨마을 김동훈 촌장)이 앞장서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곳을 치우고, 정리하면서 주변의 잡초사나를 예쁘게(?) 꾸렸고, 비어 있는 공간은 텃밭으로 가꾸기 시작했다. 2013년 5월부터 라고 한다.

텃밭에서 재배한 갖가지 농작물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곳에 이름이 붙었는데,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한 어느 마을 주민의 걷는 모습이 흡사 펍킨같이 귀엽다고 하여 '펍킨 텃밭'이었다. 사용되지 않는 생활용품과 버려진 물건들은 빈집이 늘어날수록 많아졌다. 꾸미는 공간이 골목으로 확장되었고, 담장 벽면과 골목의 가장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자연스레 '펍킨 마을'이라 불리었다. 텃밭에서 골목으로, 마을로 확장된 것이다.

이런 풍경은 SNS를 통해 조금씩 입소문이 나고, 옛 추억을 기억하는 중년들, 이미 있었던 것이지만 신세대에게는 새로운 것, 독특한 체험을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부합하였다. 골목 투어의 유행과 더불어 이슈화되기 시작했는데,

2015년 초의 일이다. 이를 시작으로 양림동의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면서 오늘의 '펍킨 마을'이 되었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당연히 펍킨 마을에는 펍킨이 살지 않는다. 다만 '퍼스트 펍킨'은 있다. 펍킨은 마을 촌장을 그리 생각한다. 퍼스트 펍킨은 선구자 또는 도전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관용어로, 남극의 펍킨들이 사냥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펍킨 한 마리가 먼저 용기(?)를 내면 뛰어든들 무리가 따라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퍼스트 펍킨의 진정한 의미는 도전 정신이다. 자의 반 타의 반, 먼저 시도하는 것이다. 마을에서 골목과 주변을 선도적으로 가꾸는 촌장이 없었다면 오늘의 광주 자산인 펍킨 마을은 없었을 것이다. 마을에서 무언가 먼저 행동하고 변화를 유도하며,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퍼스트 펍킨에 비유하고 싶다.

펍킨 마을과 영역이 겹치는 어린이공원 이후 부지 활용이 자유로운 '문화공원'으로 변경되었다. (문화공원은 어린이공원과는 달리 공원 내에 점포, 전시, 편

의시설 등의 설치 가능하다) 기존 20여채의 건물들을 거의 존치하면서 개축,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공원은 공예 예술인들의 창작과 판매 공간이 되었다.

퍼스트 펍킨인 촌장에 의해 마을 텃밭으로 시작하여 골목으로 확장되었지만, 이전 공공과 많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골목과 골목이 연결되고, 마당과 광장이 만들어졌다. 광장 주변 높은 곳은 전망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졌고, 옥상에 오를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확장되었다. 보행자 눈높이에서만 보던 것을 새가 볼 수 있는 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전망대도 만들어졌다. 이곳을 여러 체험과 추억을 간직한 사진 찍기, 기억이 가능한 공간이 되었다. 이렇게 유기체처럼 펍킨 마을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양림동 펍킨 마을이 한 사람의 선도적 노력으로 시작은 되었지만, 이후 주민들과 공공이 함께하여 골목으로, 주변으로 더 확장되어 광주의 핫플레이스가 된 것처럼 우리도 각각의 분야에서 퍼스트 펍킨 같은 생각과 실천 정신을 되새겨 볼 만하다. 이를 통해 도시 재생과 삶의 지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기고

코로나19와 보험



김양식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

제어할 수 없는 전염병이다.

대표적 팬데믹 독감은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다. 그 당시 세계 총인구 18억 명 중 약 5억 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 4000만 명이 사망하였다. 특별한 점은 사망자의 연령 분포가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는 계절 독감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청·장년층에서 사망자가 많았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참전한 미합중국 병사 중에는 전투로 사망한 병사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병사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한다. 그 후 1957년 아시아 독감은 200만 명의 사망자를, 1968년 홍콩 독감은 10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2003년 발생한 조류 독감은 가금류 등과 접촉한 사람에게 감염시켜 103명이 사망하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같은 경제 악화 현상이 엿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는 세계 경제 또한 코로나19가 위협하고 있다. 세계 각국도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더욱 염려되는 부분은 경제 약화의 여파가 서비스업과 고용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화 정책과 함께 부양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항공 및 관광 기업 등에게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 금융을, 중소기업에는 급여보조 프로그램을 감지 않아도 되는 대출과 다양한 방법의 실업 수당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는 GDP의 10%에 이르는 320조 원 규모의 경제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영국은 휴직자 급여 지원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중국은 우한에서 코로나19 극복 기념 우표를 발행하여 수익금 전액을 방제 사업에 기부할 방침이다. 일본은 GDP의 20%인 108조 엔의 경제 지원을 계획중이다. 고용 유지 기업을 지원하는 휴업 수당 상한액도 하루 8330엔에서 1만 5000엔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경제의 원상 회복에 국가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국가적 또는 가정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보험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 보험은 미래의 예기치 않은 사고와 사건에 대

비하여 공동 준비금(보험료)을 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을 보상해 경제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전염병 전용 보험 상품이 없다는 점이다. 생명보험이든 연명보험이든 지진보험, 풍수해 보험 등 자연재해와 같은 거대 위험(catastrophe)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아직까지 없다. 겨우 기존 상품에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할 뿐이다.

물론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대수의 법칙' 불성립, 보험 상품 기초 자료 작성 등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 개발에 보험 업계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앞으로 빈번히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보건안전(保健安民)이란 말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국민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생활의 버팀목으로써 보험의 본래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으면 한다.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光州日報) featuring the slogan '無等鼓' and details about the 1호 법안 (1st Bill).